

미국의 전력사정

그간의 미국의 전력사정에 대하여 나름대로 지적해 보면 첫째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담성이고, 둘째로는 원자력업계의 의기양양, 셋째는 동시다발테러 이후의 시큐어리티에 대한 관심 고조이다.

정책당국의 대담성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의 규제완화 선진국임을 인정받고 있으며, 전력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80년대 이후 본격화한 규제완화의 물결은 항공, 통신, 가스로 진전하여 '90년대 초부터는 전력분야에도 파급되었다. 전력자유화의 구호와 함께 지금까지 전 미국 24개 주에서 소매에 대한 규제완화가 실시되어 IPP, 파워 마케이터, 머천트 플랜트 등 각종 신(新)비즈니스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작년 1월의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위기, 12월의 엔론의 경영파탄을 계기로 전환점에 이른 것 같이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 부정한 전력거래(왕복거래)의 발각이 이 흐름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풍 속에서도 정책당국이 스스로의 정책 수행에 주저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 배경에는 「시장원리」와 「자유경쟁」에 대한 신앙과 비슷한 확신, 시행착오나 실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성, 각 주마다 실패와 성공이 전체적으로 상쇄되는 연방시스템 등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또는 크게 주저하면서도 즉시 방향전환을 할 수 없을 뿐인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과감하게 정책을 제언하는 정책당국의 대담성, 다소의 실패에는 기가 죽지 않는 능률함에는 정말로 감탄하게 된다.

의기양양한 원자력업계

원자력에 대해서도 최근의 미국상황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부러울 만큼 호조를 보이고 있다. 설비용률은 2001년 현재로 90.7%로 일본을 크게 상회하며, 발전코스트도 2000년 현재로 1.76센트/kWh로 과거 4년 간에 15% 이상으로 저하하고 있다.

이 원인은 운전기간의 연장, 정기점검 기간의 단축, 운전중검사의 실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주목하여야 할 것은 사업자의 의식 변화이다. 종래 규제에 의해 칭칭 얽어매져 전형적인 규제산업으로 보였던 원자력산업이 사업규제나 보안규제의 완화로 사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기책임을 발휘할 수 있는 장(場)이 된 것이다.

감가상각이 다 된 원자력발전소를 매수, 효율을 개선하여 재생시키는 원자력사업이 활황을 나타내고 있는 외에 중소 원자력발전회사가 공동으로 운전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동형로(同型爐)를 갖는 회사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용 등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원자력협회(NEI)의 담당자에 의하면 스리마일섬(TMI) 사고를 계기로 한 안전정보교환시스템의 구축, 전력자유화를 계기로 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처, 규제당국에 의한 원자력규제의 완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동 협회의 회장은 이것을 「원자력 르네상스」라 하며, 2020년에는 신규 발전소 건설로 5000만kW, 기존 발전소의 출력 증강으로 1000만kW의 발전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는 입지조건이나 안전문화 등이 달라 가볍게 비교할 수는 없으나 규제당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원자력산업의 바람직한 모습이 미국에서 구현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큐어리티의 관심 고조

동시다발테러 이후의 시큐어리티 문제는 전력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전력시설 중에서도 특히 테러대책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원자력시설과 송전시설이다.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의해 시큐어리티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장그룹의 침입에서부터 항공기의 충돌 등의 새로운 위협까지 여러 가지 사태를 예상한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공화당·민주당이 각기 독자적인 시큐어리티 강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한편 산업계는 예상위험을 초과한 테러대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며, 그 대책에 있어서는 정보와의 책임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송전시설에 대해서는 북미전력신뢰도협회(NERC)가 전력인프라에 관한 시큐어리티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4단계의 위험등급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사이버테러 대책이 중요시되고 있다.

시큐어리티의 확보는 앞으로 미국의 모든 분야에서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방위 등 본래의 의미에서 시큐어리티에 더하여 원유의 중동의존도 저하 등에 의한 에너지 시큐어리티 확보의 소리가 높아지고, 경기대책과 고용의 확보는 경제안전보장으로 불리운다. 시큐어리티 과잉과 같이도 보이거나 건국 이래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킨다」는 것이 전통인 미국의 면목을 과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론

미국은 본래 독립된 여러 주(州)가 모여서 생긴 연방국가(합중국)이다. 각 주마다의 개성이나 풍토가 좋건 나쁜건 미국의 다양성과 활력을 키워 왔다. 전력분야에서는 그 다양성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또는 주정부 간의 알력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송전기관(RTO)이나 표준시장설계(SMD)의 구상은 그 다양성을 통일화하여 표준화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앞으로 규제완화의 동향이 주목되는 소이(所以)이다. (자료 : 일본 「電氣評論」)